

2002년 석유산업의 회고



이 동 현 | 문화일보 기자

2002년 국내 석유산업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9·11테러로 촉발된 중동 전쟁 발발에 대한 위기감이 한 해를 지배했고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대규모 환차익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의 영업 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더구나 석유수입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크고 작은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가격 자유화 이후 더욱 가속화된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혼란도 뾰족한 해결의 기미는 없었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용역보고서를 내놓기는 했지만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유통질서 회복을 위해 '메스'를 대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그나마 최근 산자부가 2003년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 제도를 전격 실시키로 했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인력난도 석유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질적인 공급과잉과 밀어내기식 제품 수급으로 수도권 주유소들의 수익성은 크게 높아졌지만 힘든 일을 기피하는 추세가 더욱 심화되면서 주유소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2002년 업계 최고의 이슈메이커는 역시 세녹스. 대체연료나, 유사휘발유나를 놓고 큰 논란을 빚은 세녹스 제조사 프리플라이트는 지난달 석탄추출물로 만든 대체연료를 수입하여 '슈퍼세녹스' 이름으로 2003년부터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또 한 번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차기 연료 대기환경 기준 강화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경유 및 LPG 가격 인상도 2002년 업계를 뜨겁게 달군 주요 뉴스였다.

환경부가 이르면 오는 2005년까지 휘발유 및 경유에 포함된 황함유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대 1/30까지 낮추는 새로운 자동차 연료품질 개선 시안을 내놓으면서 정유업계는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

2003년 본격 시판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수퍼 세눅스도 벌써부터 논란의 진원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제조사측 주장대로 휘발유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시판된다면 시장 점유율을 급속하게 높여 국내 석유산업에 적잖은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 높았다.

2001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에너지 세제 개편안도 최근 경유차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맞물려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02년 차량용 LPG 가격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고 경유가격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경유차량이 늘어나면서 유사 휘발유에 이은 유사 경유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신종연료의 끊임없는 등장은 석유산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02년 들어 등장한 굵직한 신종연료만 해도 오리멸전, 수퍼세눅스, 바이오디젤 등 세 가지. 게다가 액화천연가스(LNG)가 자동차용 연료, 가정용 액화프로판가스(LPG) 시장과 발전연료로 쓰이는 중유시장에 심대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에너지원의 파괴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신종연료의 영역 확대는 국내 석유시장의 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도 200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대표적인 장치산업인 정유업계에 이같은 추세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고질적인 공급과잉에 석유제품 수입사들이 너도나도 시장에 뛰어들면서 석유산업 스스로의 목줄을 움아매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오리노코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천연 역청에 물과 계면활성제를 첨가, 혼합한 연료인 오리멸전은 기존 발전소용과 수송용 중유를 대체할 강력한 신연료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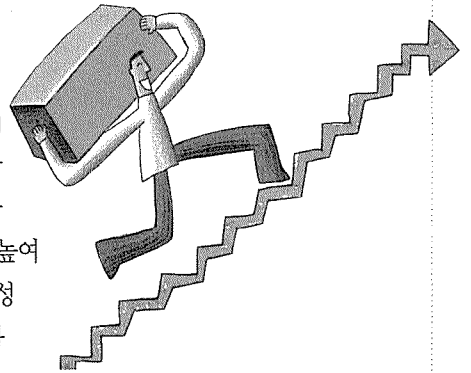
중유에 비해 열량 단가가 30~40% 가량 낮아 경제성 면에서 중유보다 한 수 위인 것으로 알려진 오리멸전은 이미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남부발전이 2003년 1월 2만5000톤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향후 연 60만톤 가량을 구매할 계획이다.

남부발전은 올해 안에 영남화력 1, 2호기의 중유-오리멸전 겸용 개조를 완료하기로 한 상태다. 남동발전 뿐 아니라 앞으로 오리멸전 겸용 개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발전소들이 적지 않아 본격적인 중유 대체연료 발전 시대를 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신한 에너지가 평택에 연산량 10만톤 규모의 바이오디젤 공장을 준공, 본격적인 대량 생산체제를 갖춘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콩이나 폐식용유 등에서 나온 추출물로 만든 콩기름 경유인 바이오디젤은 차량용 경유를 대체할 새로운 대체 연료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경유와 식물 추출물을 8대 2로 혼합해 'BD20' 이라는 제품명으로 이미 시범 판매되고 있다. 대기오염 부담이 적은데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은 이 제품의 실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2003년 본격 시판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슈퍼 세녹스도 벌써부터 논란의 진원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제조사측 주장대로 휘발유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시판된다면 시장 점유율을 급속하게 높여 국내 석유산업에 적잖은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경제성과 품질 면에서 기존 휘발유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등장 자체만으로 기존 업계의 판도에 심리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결국 무산되어 버린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 차등화 문제와 주유소 인력 수급 문제, 또 국내 석유 유통시장에 대변혁을 몰고 올 유류구매전용카드 사용과 현재 시행중인 마커(식별 첨가제) 사용, 제조물책임(PL)법 논란도 2003년 석유산업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업계 취재를 다니다 보면 누구 하나 요즘 살 맛 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 정유사는 정유사대로, 석유수입사는 수입사대로, 주무부처는 물론 요즘 재미가 짹짹하다는 주유소 사장들도 죽는 소리를 하기는 매한가지다.

사실 석유산업이 요즘 잘 나간다는 정보통신이나 생명과학처럼 미래 첨단산업이 될 리는 없다. 매년 떨어지기만 하는 국내 에너지의 석유의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IT, NT, BT처럼 'T' 자 돌림의 산업들처럼 장밋빛 미래를 점쳐보는 것도 요원한 일이다.

어딜 가봐도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선결과제다 하는 식으로 문제점만을 지적할 뿐,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국가기관이고 민간연구소고 간에 끊임없이 관련 보고서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거 다 싶은 해결책이 눈에 띄는 것은 아니다.

국내 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필자에게 미시적인 몇몇 사안에 대해, 그것도 업체별로 어떤 사업 방향을 잡아야 할 지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석유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만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잘라 말한다.

그는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사실상 국내 석유산업은 비상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국내 석유산업이 경쟁력 획득을 위해 성장통(成長痛)을 겪고 있는 상황 이기는 하지만, 또 석유의 에너지 의존도가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단순히 석유산업을 시장경제의 원칙에 내맡기는 것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통용될 리는 만무하다.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 처등화 문제와 주유소 인력 수급 문제,
또 국내 석유 유통시장에 대변혁을 몰고 올 유류구매전용카드 사용과
현재 시행중인 마커(식별 첨가제) 사용, 제조물책임(PL)법 논란도 2003년 석유산업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시장경제의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칙 자체가 기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그런 전제 하에서 아직까지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유통구조의 개혁과 시장 시스템의 보완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과제다.

국내 석유산업과 직·간접으로 관계된 모든 경제주체들도 이같은 어려움과 혼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정유업체는 업계대로 - 물론 몇몇 업체에 한정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 미래 산업으로의 변신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수익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 성숙해진 소비자들의 의식도 장기적으로 국내 석유산업 정상화에 일조를 할 만 하다. 품질과 가격 등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소비자들도 그들을 기만하는 업체나 경제주체들에게서 등을 돌릴 것임에 틀림이 없다. 정유업체와 관련단체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석유제품 가격형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제 단순히 정유업체나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불평만 늘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 생산, 세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국가기간산업이라는 명목 하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구할 일도 아니고 수십년 간 계속되온 유통질서의 혼란을 정치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관련부처의 복지부동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유통주체들이 모두 정상적인 시스템 내에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석유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

